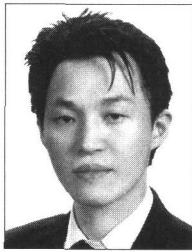


장기적인 원유수급안정의 중심은 올바른 생산자대책이다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지난 해는 FMD 여파로 원유생산량이 189만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우유 부족으로 각 유업체들은 원유증산을 위한 장려책과 더불어 집유쟁탈전이 벌어졌다. 급기야 집유선 동결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원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탈지, 전지분유를 포함한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142,200톤이나 배정하였다. 우유가 모자라 학교우유급식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는 유업체 대표들과 원활한 학교우유급식 공급을 위한 MOU도 체결되었다.

유럽연합과의 FTA는 지난 해 7월 발효되었고, 한미 FTA는 지난 3월 15일부로 발효되어 이제 우리 낙농산업은 본격적인 FTA 체제 하에 놓이게 됐다. 낙농산업은 그 특성상 국민에게 신선하고 양질의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잉여를 안고가야 하는 산업이다. 우리는 지난 해 경험에서 우유가 남아도 문제지만 부족한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FTA 체제 하에서 장기적으로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낙농제도개선의 올바른 대책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과 미국은 낙농선진국으로 주요 유제품 수출국이다. 이로 인해 우리 낙농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또한, FTA 하에서의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소비기반 확충과 선진화 된 낙농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낙농부문 피해보전직불금 문제다. 낙농부문 피해보전직불금은 현재로선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 산출기준을 출하 마릿 수에서 낙농의 특성에 맞게 납유량으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발동요건은 가격에 맞춰져 있다. 지난 해

원유가격 현실화 투쟁 이후 어렵사리 원유가격 연동제가 합의되어 2013년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다. 원유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낙농가들이 수취하는 원유가격은 사실상 떨어질 수 없는 구조다. FTA로 인한 수입유제품의 범람은 낙농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이는 현재 농가마다 부여받고 있는 쿼터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이는 곧바로 소득감소와 생산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서는 낙농부문은 피해보전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폐업보상 역시 피해보전직불금이 발동되어야 폐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보상이 어렵다.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부문의 피해보전대책이 이렇다면 이는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다.

다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낙농선진화대책 문제다. 낙농선진화대책의 핵심은 전국단위 수급관리 제도다. 정부는 장기적인 원유수급목표를 200만톤으로 설정하고, 원유수급조절 관리 권한을 새로이 신설되는 중앙낙농기구를 통해 전국단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낙농기구에 참여하는 각 집유주체에는 수급목표량을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과부하된 현재의 225만톤 쿼터를 2010년 생산기준인 207만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가공원료유 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사료쿼터, TRQ물량,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차등지원하여 집유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집유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집유일원화를 충남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유업체 동참 유도를 통해 전국적인 집유일원화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신설되는 중앙낙농기구가 쿼터관리는 하지 않고 수급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수급관리는 참여하는 집유주체, 즉 유업체에 수급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수급목표량의 정의와 관리기준, 운영방법 모두 모호한 상태다. FTA 하에서 수급목표량을 유업체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면 유업체에 생산쿼터 삭감의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인센티브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참여방안 역시 제제 성격이 높다. 가공유 지원과 관련해서도 직접 수혜 당사자가 집유주체인지 농가인지 자체도 모호하다. 집유주체의 정의 또한 마찬가지다. 가공유지원을 집유주체에 한다

면 하나의 집유주체로 보고 있는 낙농진흥회, 직거래조합의 지원방안 역시 모호하다. 예산의 문제로 한정된 가공유지원 300억은 향후 관세철폐에 따라 생산비와 국제분유가 간의 차이가 벌어질 경우 가공유지원 20만톤 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집유일원화 방안 역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충남지역 낙농조합만을 우선으로 집유일원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의지 역시 없어 보인다. 중앙낙농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현재보다도 못한 정부(공익대표), 유업체 편중 의사결정 구조로 전략할 우려가 높고 명목상의 생산자협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낙농제도 개편은 누구를 위한 제도개편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 FTA 체제 하에서 낙농제도 개선의 중심은 반드시 생산자대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6천호 낙농가가 우리 국민들의 필수식품인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FTA 하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업 유지는 무엇보다 생산자 중심의 정책마련과 국산원유의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에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부문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를 낙농특성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우유소비정체와 원유생산량 회복으로 수급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배정은 차제에 중단되어야 한다. FTA로 유업체에게는 해외원료기지를 확보해주고, 유업체의 수급목표량을 기준으로 수급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전국단위 수급관리는 정부의 분명한 목표설정으로 올바른 생산자대책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해외사례로 들고있는 일본의 중앙낙농기구인 중앙낙농회의는 생산자의 생산자율권을 보장하고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현재의 수급관리제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원유수급문제를 집유주체별로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집유일원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낙농제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면 벌써 예전에 끝났을 사안이다. 정부의 낙농선진화 대책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